

‘보수·진보 프레임’의 한계와 미디어 비평의 과제*

손석춘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이 논문은 민주주의의 위기와 저널리즘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그에 근거해 미디어 비평이 ‘민주주의 유지와 성숙’을 견인하는 학술 운동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가 절차적·실질적 차원에서 모두 후퇴한 데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 비평의 기준을 ‘민주주의 유지와 성숙’에 뒤편해야 할 이유는 미국과 유럽의 저널리즘 이론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저널리즘의 목적은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고 스스로 다스리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공론장은 속의 민주주의의 조건이다. 이 논문은 구체적 비평의 전략으로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보수·진보의 프레임 탈피다. 진영 논리는 어떤 미디어의 보도와 논평이 민주주의 후퇴에 책임이 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중요성을 희석시킬 수 있다. 둘째, 노사 관계에 대한 비평 확대다. 한국의 노사 관계는 언론 지형과 공론장 못지않게 크게 기울어져 있다. 저널리즘은 노사 관계 의제 설정에 인색했고, 보도와 논평을 하더라도 대부분 ‘자본 편향’이었다. 셋째, 주권자의 역량 강화다. 민주주의가 ‘민중에 의한 통치’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중의 역량 강화다.

KEYWORDS 미디어 비평, 저널리즘, 정파성, 노사 관계, 역량 강화

* 이 논문은 한국언론정보학회 2016 가을철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바 있음.

** 2020gil@hanmail.net

1. 문제 제기

“언론을 바로 세워야 나라가 산다.” 2016년 11월 ‘공정한 언론 구조와 민주주의의 정립을 촉구하는 언론·방송학자 일동’의 시국 선언문 제목이다.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가 모두 참여한 시국 선언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파괴를 가져온 현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며, 대다수의 국민과 같은 마음으로 철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언론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현재의 한국 언론은 권력 집단의 일원으로서 혹은 권력 집단에 의해 조종되면서 권력에 대한 감시자이기보다는 권력의 공모자, 호위자로서 기능해 왔다. 작금의 국정 농단과 국정 마비 사태에 언론이 일정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언론이라도 바로 섰더라면 이러한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며, 최소한 경종이라도 울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국 선언은 “사회적 공기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언론을 정립하고, 권력의 코드 맞추기로 작동되는 방송 지배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요컨대, 방송법 개정, 편집 독립권 보장 등 언론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언론 관련법 개정은 언론 운동 단체들에서도 요구하고 있듯이 해결 과제임이 틀림없다. “언론이 자신의 본령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학자적 양심에 따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학계의 다짐도 의미 있다. 다만 언론학계가 ‘언론 바로 세우기’에 나설 때, 관련법 개정 못지않게 미디어 비평을 더 활발하게 연구하고 그때그때 논의해 가는 ‘마당’을 만들어야 한다. 언론을 바로 세운 궁극적 모습은 언론의 생산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공정하고 책임 있는 언론 구조를 견인해 내지 못한 책임을 우리 언론·방송학자들 역시 깊이 통감한다”라는 시국 선언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그 ‘책임의 통감’을 미디어 비평에서 파악하고자 한다.¹⁾ 이 논문에서 미디어 비평은 관행적 의미로 사용해 온 ‘언론에 대한 비평’, 곧 저널리즘 비평으로 제한했다.²⁾ 언론의 존재 이유는 미국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Kovach & Rosenstiel, 2001)이나 유럽의 공론장 이론(Habermas, 1962/2001)이 제시하고 있듯이 민주주의에 있다. 언론의 위기는 곧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1) 물론, 미디어 제도적, 구조적 개선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미디어 법제의 개선은 언론인들이 자유롭게 보도와 논평에 나서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미디어 비평이 활성화될 때 제도개선의 공감대도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미디어비평은 미디어 자체가 폭넓기 때문에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이 논문에서 미디어비평의 범위를 저널리즘으로 제한한다고 해서 연구자가 비평의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미디어 비평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은 또 다른 연구주제다.

에 없다.

이 논문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에 한국 언론의 책임이 크다는 문제의식 아래 저널리즘 연구 동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미디어 비평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미디어 비평의 새로운 과제는 인터넷이 열어 놓은 미디어 지형의 지각 변동과도 이어져 있다. 모든 사람이 언론 활동을 하는 시대라거나 “우리가 곧 미디어”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실감할 만큼 미디어 지형은 급변하고 있다. 그에 따라 거의 모든 사람이 미디어를 비평한다고 보아도 좋을 정도로 언론에 대한 네티즌의 감시가 일상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 비평의 준거가 흔들리고 있어 과당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조중동은 애국 언론’이고 ‘한겨레’나 ‘경향신문’은 ‘종북 언론’으로 규정해 인터넷에 글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조중동은 악’이고 ‘한겨레’나 ‘경향신문’은 선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그리고 김대중과 노무현은 옳다거나 그 반대의 주장들 또한 정파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비평’들이다. 더구나 언론학계 일각에서 저널리즘을 ‘보수·진보의 프레임’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이어지면서 의도와 무관하게 정파적 언론에 담긴 문제의 본질을 희석할 수 있기에 학술 공론장에서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민주주의의 위기와 저널리즘의 상관성을 실제 사례를 들어 분석하고, 그에 근거해 미디어 비평이 ‘민주주의 유지와 성숙’을 견인하는 학술 운동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2. 언론의 정파성과 언론학

1) 언론학계의 ‘언론 정파성’ 비판

미디어 비평의 학문적 논의는 저널리즘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담은 연구들에서 찾을 수 있다. 언론에 대한 학문적 분석은 미디어 비평에 이론적 기반과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언론학계는 오래전부터 한국 저널리즘의 심각한 병폐로 ‘정파성’을 지적해 왔다(강명구, 2005; 김동윤·김성해·유용민, 2013; 김영옥, 2011; 박영흠·김균, 2016; 박재영·안수찬·박성호, 2014; 손석춘, 2006; 이민웅, 2003; 이재경, 2004; 이정훈·이상기, 2016; 이준웅, 2004; 최영재, 2011; 최진호·한동섭, 2012). 최근의 한 연구자는 “과도한 정파성이 저널리즘에 대한 신뢰의 하락, 나아가 저널리즘의 근본적 위기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개선되기보다 오히려 심화된다. 이제 자신과 대립되는 정권이나 정파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과 극단적 저주를 퍼붓는 저널리즘의 모습은 어느새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

이 되었다”라면서 가장 큰 문제는 비판에 귀 막는 언론에 있겠지만 학계와 시민 사회도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기존의 비판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박영흠·김균, 2016).

또 다른 연구자(이정훈·이상기, 2016)는 “정파성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적 분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되었다”라며 정파성 심화의 계기를 ‘진보 정권’의 등장으로 분석했다. “IMF 외환 위기는 언론의 물적 토대를 크게 약화시켰고, 같은 시기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집권에 성공한 진보 정권이었던 김대중 정부는 언론사 세무 조사 등을 통해 이미 물적 토대가 취약해진 보수 언론에게 불안감을 고조시켰다”라는 것이다. 더구나 “집권과 함께 보수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 사이에는 더욱 선명하고 날카로운 정파적 대립 구도가 만들어졌다. 노무현 정부 집권 기간 내내 보수 언론과 노무현 정부 사이에는 고소·고발이 그치지 않았고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은 사사건건 부딪치며 서로에게 어깃장을 놓았다”고 지적했다.

2016년에 발표된 두 논문(박영흠·김균, 2016; 이정훈·이상기, 2016)은 한국 언론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비판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저널리즘의 문제점을 분석해 온 논문들이 “서구적 전문직주의를 준거로 내세우고 저널리즘이 그로부터 이탈했기 때문에 전문직화만 달성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한국 저널리즘이 “서구와 동일한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작동하며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서구 저널리즘과 동일한 내적 논리를 갖는다는 전제에 기반을 둔다”라는 분석(박영흠·김균, 2016)도 의미 있는 지적이다.

두 논문은 “서구 저널리즘”의 정파성은 긍정적으로 보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정훈과 이상기(2016)는 “공영 방송과 같은 특수한 매체 형식을 제외하면 언론이 정치적 입장을 갖는다는 것이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정치적 다원주의(pluralism)가 잘 정착되어 있는 사회라면 언론이 저마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시민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은 그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이 최대한으로 대표되고 반영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고도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문제가 있다면 정파성 그 자체가 아니라 정파성이 시민들에게 관철되는 방식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영흠과 김균(2016)은 “서구 저널리즘에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정파성이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받는 것은 한국 저널리즘의 정파성이 갖는 고유한 성격 때문”이라며 “오늘날 한국 저널리즘의 정파성은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도출된 이념과 노선보다는 감정과 도덕에 기반을 둔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옳고 다른 한쪽은 일방적으로 잘못했다는 선악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반대쪽 진영은 논리적 근거에 기초한 이성적 비판을 받기보다는 사실의 왜곡이나 과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감정적 공격과 악마화(demonization)의 대상이 된

다”고 분석한다.

저널리즘에 대한 학문적 분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두 논문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더구나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병폐’인 정파성에 대해 “본격적인 학술적 접근”을 자부했다는 점에도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두 논문이 지닌 긍정적 의미와 별개로, 과거의 문제점을 답습하거나 확대 재생산하는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다. 10년 전에 손석춘(2006)은 이재경(2004)과 이민웅(2003)의 연구가 ‘사회 제도로서의 저널리즘의 위기’를 주장하고 ‘현대 사회의 핵심인 공론장(public sphere)’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거론한 점을 평가하면서도 ‘정파적 대결상만 강조하고 있을 뿐, 어떤 것이 저널리즘의 기본에 충실한 보도와 논평인지 더 들어가는 분석을 회피하고 있어 구체적 내용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2016년에 발표된 두 논문은 정파적 대결상을 더 과도하게 부각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 언론의 정파성이 더 심화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만 보기엔 문제가 심각하다. 이정훈과 이상기(2016)는 “언론에 대한 언론학자들의 평가도 크게 다를 바 없다. 과장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한국에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언론만 존재하는 것 같다. 하나는 디지털 매체 기술의 확산에 따른 수익성의 압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에 급급한 언론이고, 다른 하나는 정파적 편향성을 강화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몰두하는 언론”이라고 단언한다. 박영흠과 김균(2016)은 “보수 신문에서는 건국 과정과 산업화의 역사를 성스러운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거부하거나 비판하는 전교조와 민주노총, 진보 진영을 악마화하는 상징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 반대로 진보 신문은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신성시하고 노동과 시민 사회적 가치를 절대 선으로 규정하며 이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을 악마화하는 상징체계를 보여 준다”면서 “〈한겨레〉가 한나라당을 만발하는 ‘악마의 꽃’에 비유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신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닙니다’라고 선언하는 식이다. 이들이 만들어 낸 상징체계의 영향력은 신문 독자로 한정되지 않고 인터넷 포털 뉴스와 오피니언 리더들을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된다”라고 지적했다.

논문은 바로 이어 “저널리즘의 본령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이지만 한국의 저널리즘은 권력의 향배와 관계없이 자신의 상징체계를 이탈한 ‘악한 것’만을 비판하고 감시한다. 따라서 자신과 대립하는 정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 이들은 ‘할 말은 하는 비판 언론’이 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 ‘권력에 순종하는 어용 언론’으로 돌변한다.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진보 신문이 비판 언론, 보수 신문이 어용 언론이 되고 현 야당이 집권하면 그 역할이 바뀐다. 보수 신문과 진보 신문이 각각 기획하고 구축하는 도덕적 질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이 형성되고 작동하는 원리는 정확히 동일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박영흠·김균, 2016).

2) 언론 정파성 비판한 언론학 비판

한국 언론은 정파성이 심각하다.³⁾ 하지만 그 학술적 분석이 앞서 언급한 두 논문의 논리로 전개될 때 적잖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지금 한국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에 급급한 언론”과 “정파적 편향성을 강화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몰두하는 언론” 두 가지뿐이라는 판단(이정훈·이상기, 2016, 29~30쪽)은 수익성 이전에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저널리즘의 생명인 권력 감시와 진실 보도를 위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언론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의 저널리즘은 권력의 향배와 관계없이 자신의 상징체계를 이탈한 ‘악한 것’만을 비판하고 감시한다. 따라서 자신과 대립하는 정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 이들은 ‘할 말은 하는 비판 언론’이 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 ‘권력에 순종하는 어용 언론’으로 돌변한다”라는 박영흠과 김균(2016)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를테면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진보 신문이 비판 언론, 보수 신문이 어용 언론이 되고 현 야당이 집권하면 그 역할이 바뀐다. 보수 신문과 진보 신문이 각각 기획하고 구축하는 도덕적 질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이 형성되고 작동하는 원리는 정확히 동일한 것”이라는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 그렇게 주장한 논거로 제시한 <한겨레>의 손석춘(2006, 6, 10)과 곽병찬(2015, 4, 1) 칼럼을 보자. 손석춘 칼럼의 기초는 게재된 시점의 현존 대통령인 노무현에 대한 비판이다. 칼럼 내용의 70% 이상이 한나라당 아닌 집권당과 청와대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를 무분별하게 추종하고 비정규직 해결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기에 “신자유주의 확산을 틀거나 적어도 늦추리라 기대했던 노무현 정권은 되레 ‘앞잡이’가 되었다”고 비판했다.⁴⁾ 칼럼에 나오는 ‘악마의 꽃’라는 말은 당시 6월대항쟁 기념일을 앞두고 고 이한열이 생전에 쓴 시⁵⁾에서 따온 것으로,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기 위한 도입 장치다. 곽병찬의

3) 물론, 한국 언론의 문제점이 정파성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세월호’ 침몰 보도에서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거나 왜곡해 ‘기레기’라는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그에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에는 언론이 정보원으로서 검찰과 ‘검찰 관계자’를 과도하게 인용하며 인신공격을 한 책임도 있다(정미정, 2009). 이 논문은 현 시점에서 미디어 비평이 풀어야 할 가장 큰 문제를 정파성이라고 판단했을 뿐, 다른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미디어 비평이 정파성의 틀을 벗어날 때 다루는 영역도 더 넓어지리라 전망한다.

4) 칼럼의 주요 대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민중은 김영삼은 물론, 김대중에 이어 노무현을 대통령에 앉혔다. 그러나 어떤가. 파국을 맞은 김영삼은 논외로 하자. 김대중은 남북 관계의 열매와 대조적으로 한국 경제를 신자유주의 체제에 예속시켰다. 신자유주의 확산을 틀거나 적어도 늦추리라 기대했던 노무현 정권은 되레 ‘앞잡이’가 되었다. 하여, 노 정권의 ‘쇠귀’에 마지막으 촉구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포기하라. 뜻만 있다면 얼마든지 모양 갖춰 물러설 수 있다. 비정규직 입법도 제대로 하라. 노사 관계 ‘선진화’를 노사 대화로 풀어 가라. 6·15 공동 선언에서 한걸음이라도 나아가라. 마지막 촉구도 ‘경 읽기’로 흘릴 때, 심판은 벼락이 더 가혹할 터이다. 무엇보다 노 정권의 아집 때문에 이 땅의 역사가 뒷걸음질할 수는 없다.”(손석춘, 2006, 6, 10).

칼럼은 “당신(박근혜 대통령)의 꿈은 민주 공화국의 대통령이 아니었다”라며 그 근거를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태도”에서 찾았다. 세월호 참사에 대통령의 대응이 상식을 벗어났고 그 진상을 규명하는 움직임에 냉담한 반응을 보여 온 사실을 언론인이 비판하는 칼럼을 ‘정파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정당한지 의문이 든다.⁵⁾

흔히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와 <한겨레>·<경향신문>을 정파의 두 진영이나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으로 나눈다. 심지어 그 연장선에서 김대중과 노무현은 ‘진보 정부’이고 이명박과 박근혜는 ‘보수 정부’로 구분하기도 한다. 하지만 언론과 권력에 대한 그런 비판은 전혀 학문적이지 못하다. ‘편 가르기’식 표층적 구분이 넘치는 네티즌들의 미디어 비평을 견인해 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언론학이 오히려 그런 논리를 ‘본격적인 학술 논문’으로 전개하고 나선다면, 한국 언론이 정파성을 넘어설 가능성은 어둡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와 <한겨레>·<경향신문>은 아무리 ‘정파’라는 기준을 들이대도 동일 선상에서 비판받을 수 없다. 자신들의 언론사(또는 언론사주) 이해관계와 다르다고 해서 사실까지 왜곡하며 정부를 비난하거나 시민 사회 단체들을 ‘중복 좌파’로 몰아 온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와 달리 <한겨레>·<경향신문>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대한 ‘권력 감시’를 망기하지 않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사회 경제 정책 기조인 신자유주의를 집권 내내 비판했다. 그 말은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와 달리 <한겨레>·<경향신문>이 언론으로서 결점이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비판의 영역이어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가 그렇듯이 <한겨레>·<경향신문>이 편향성을 보일 때도 더러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진보 신문이 비판 언론, 보수 신문이 어용 언론이 되고 현 야당이 집권하면 그 역할이 바뀐다”고 주장한다면 너무 거친 단순화다.

물론, <한겨레>·<경향신문>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나 미디어 비평도 필요하다. 하지

5) “그대 타오른 자리에/ 다시/ 악마의 꽃이 만개하고”의 시 제목은 ‘진달래’다. 1987년 작품이다. 이한열은 사월의 진달래를 짓밟은 군부 독재를 악마의 꽃이라 불렀다.

6) 칼럼의 주요 대목이다. “아이들 250명을 포함해 304명의 시민이,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서히 죽어 갔는데, 당신은 아무런 책임도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티브이가 생중계를 하다시피 했는데, 당신은 그걸 보지도 듣지도 않았는지, 뒤늦게 대책본부에 나타나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만 했습니다. 그게 벌써 1년 전입니다. 대한민국을 개조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그건 어리숙한 정부와 어리숙한 지도자의 실수 때문이라고 합시다. 그 뒤 이 정부와 여당 그리고 그 추종자들이 한 일은 피해자를 조롱하고, 야유하고, 자식 잃은 부모를 불한당으로 내몰고, 돈이나 밝히는 패륜부모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을 비하하고, 놀리는 것이었습니다.”(곽병찬, 2015)

만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를 분석할 때와는 다른 틀과 기준으로 비평하고 비판해야 더 생산적이고 의미도 있다.⁷⁾

둘째,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는 ‘보수 언론’이고 〈한겨레〉·〈경향신문〉은 ‘진보 언론’으로 단정하는 것은 학문적이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 ‘보수’와 ‘진보’인가를 묻는 ‘학술적 논의’- 그렇다고 그런 학문적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다. 이 논문에서 그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는 뜻이다- 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한국 언론을 ‘보수/진보’의 정파로 나누어 규정할 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실종된다. 어떤 언론이 저널리즘의 본분에 충실한가를 따져야 옳은 상황에서 ‘보수/진보’로 나누는 정파의 틀은 정작 문제의 핵심을 놓치게 할 수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를 ‘보수 정부’로, 김대중과 노무현을 ‘진보 정부’로 규정하는 대목 또한 정치학계의 판단 이전에 상식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만일 그런 규정이 옳다면, 한국 사회는 두 차례에 걸쳐 10년 동안이나 진보 정권이 들어섰다는 뜻인데, 그 주장에 동의할 노동자·농민·영세 자영업자·청년 실업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만일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진보 정부’라면, 현재 원내 진보 정당인 정의당이 집권할 때는 무슨 정부가 될까. 진보 정당의 역대 원내 정당들은 국회 안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가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보다 좁다고 주장해 왔다. 노동 운동과 농민 운동도 민주당을 보수 정당의 분파로 보고 있다.

두 논문의 연구자들도 적시했듯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단체(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IU)가 발표한 2015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그룹에서 ‘미흡한 민주주의’ 그룹으로 추락했고, 국경없는기자회(RSF)가 해마다 발표하는 ‘언론 자유 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2015년 순위보다 열 계단 하락하여 2016년에 역대 최저인 70위를 기록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31위와 비교하면 큰 폭의 추락이다. 국경없는기자회는 박근혜 정부가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프리덤하우스 조사에서도 한국은 ‘언론 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 자유국’으로 등급이 낮아졌다. 2015년 언론 자유 지수에서 나미비아와 함께 공동 67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파푸아뉴기니와 수리남보다도 열 계단이나 낮은 순위다.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과 언론 자유 수준이 지속적으로 추락해 온 지난 10년, 한국 언론에 대해 옳고 그름을 규명하지 않고 ‘보수/진보’나 ‘정파성’의 잣대로만 들이대는 최근의

7)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와 달리 적어도 진실을 왜곡하거나 반민주적인 기능을 하진 않았다. 다만 이 논문에서 후술할 실질적 민주주의나 주권자의 역량 강화라는 점에서 얼마나 충실한 보도를 해 왔는가는 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학문적 분석은 언론 현실과 민주주의 실상을 오도할 위험성이 충분하다. 민주주의 위기와 언론이 어떤 상관성을 지니고 있는지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질 수 있다. 한국 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분석이 안이하다고 단언할 수 있을 만큼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심각한 훼손을 입었고 그 과정에 언론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3. 정파 프레임의 한계: 민주주의 후퇴

1) 절차적 민주주의 후퇴: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언론

인터넷 미디어가 공론장을 확대했다거나 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혀 가리라는 전망을 어둡게 한 사건이 2012년 12월 대선에서 일어났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 그것도 대통령 선거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한 증거가 2013년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리거나 리트윗한 대선 관련 글이 5만 5,689건에 이른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됨으로써 실제 대선 결과에 끼친 영향이 논란을 빚었다. 확인된 대선 개입 트위터 글은 '빙산의 일각'일 뿐, 500만 건에 이를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여론 조사 기관 리서치뷰가 2013년 10월 2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박근혜 후보를 찍은 투표층 중 8.3%는 경찰이 사실대로 발표했다 경우 문재인 후보를 찍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정상근, 2013, 10, 28).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을 것이라고 응답한 8.3%를 박근혜 후보 투표율 51.55%에 대입하면 4.28%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 값을 두 후보의 최종 득표율에 반영할 경우 박근혜 후보는 51.55 → 47.27%, 문재인 후보는 48.02% → 52.3%로 나타난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정치 공작을 규탄하는 시국 선언이 이어지면서 200여 시민 사회 단체가 비상시국회의를 구성하고 '국가 정보기관에 의해 흔들린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며 촛불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방송 3사와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는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국가 정보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해 일어난 각계 시국 선언과 촛불 집회를 외면하거나 축소했다(민주언론시민연합, 2013).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2013년 6월 22일부터 7월 1일까지 열흘간 촛불 집회와 관련된 기사를 단 한 건도 신지 않았다. 공영 방송인 KBS와 MBC는 단신 1건 보도하는 데에 그쳤고 그것조차 '국정원 사건에 대한 진보와 보수 진영의 집회가 열렸다'라며 보수·진보 프레임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두 건 모두 촛불 집회를 폄훼하고 비난하는 기사였다.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에 등장한 '박근혜 OUT'"이라는 제하의 기사(정우상, 2013, 6, 24)는 "대선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야권이 집요하게 정치 이슈화한 근본적 목적이 바로 정권의 정통성에 흠집 내기"라며 익명의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부각했다. "시국선언 이어 촛불...국정원 사건 시위, 광우병 때와 닮은꼴"이라는 제하의 기사(선정민, 2013, 6, 29)는 '반미 투쟁'을 하기 위해 국정원 촛불 집회를 열고 있는 듯이 왜곡 보도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공영 방송과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가 "선거 개입의 공범자임을 자처하는 결과"라고 모니터 결론을 내린 것도 무리는 아니다. 실제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은 아직 실체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공론장에서 논의가 사라졌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⁸⁾

2) 실질적 민주주의 후퇴: 노동 권리 약화와 언론

"노동은 한 사회 모든 구조물의 기반을 이루는 힘이다. 경제 성장도, 시장도, 재벌 대기업도, 그리고 민주 정부도 모두 노동에 기반을 둔 사회 공동체 위에서 있는 것이다."(최장집, 2005) 최장집이 '노동 없는 민주주의'를 비판하며 강조한 명제다. 그에게 노동의 위기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노동의 위상은 열악하다. 민주화 이후 시간이 갈수록 노동자들은 시장 상황에 무력하게 휘둘리는 종속적인 지위로 빠져들었으며 그런 상황은 박근혜 정부 들어 가속화했다. 국제노동총(ITUC)이 세계 141개국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3년 연속 노동자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나라로 꼽혔다(매일노동뉴스, 2016). ITUC가 발표한 세계 노동 권리 지수(GRI)에서 한국은 5등급인 '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No guarantee of right)' 나라에 들어갔다. 한국과 함께 5등급 나라는 중국 · 이집트 · 방글라데시 · 과테말라 · 이란 · 짐바브웨 등 24개국이다. 5등급보다 낮은 5+등급이 있긴 하지만 5+등급은 '내전 등의 상황으로 노동 기본권이 보장될 수 없는 나라'다. 1등급 국가는 오스트리아 · 덴마크 · 핀란드 · 스웨덴을 포함한 13개국이다.⁹⁾

8) 2016년 10월부터 드러난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추락했는가를 여실히 보여 준 사건이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개입해 일부만 드러난 '국정원 대선 개입'의 실체가 모두 드러날 때 충격은 더 클 수 있다.

9) 한국이 ITUC 노동 권리 지수 조사 결과에서 3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한 사실도 대부분의 언론이 외면했다. 그래도 <경향신문>(2016, 6, 13)은 사실을 통해 해결을 촉구했다. 사설의 주요 대목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계가 특하면 정부를 국제 기구에 제소하면서 이미지가 악화됐고 ITUC 평가가 가맹 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계가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노동 현실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평가해 등급이 실제보다 낮게 나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초래한 책임을 노

그럼에도 ‘노동 탄압 국가’의 대통령 박근혜는 2015년 9월부터 ‘노동 개혁’을 내걸고 노동 관련 법안 개정과 함께 일반 해고와 취업 규칙 임의 변경을 추진했다. 노동계가 반대하고 나서자 일반 해고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정부 지침이 나오자 경총은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이나 일반 해고제를 시행하라고 회원 기업에 ‘가이드북’을 내려 보냈다. 취업 규칙을 개정할 경우 노조 합의가 없더라도 강행하라고 권했다. KT와 두산 모트를 비롯해 적지 않은 기업들이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들을 저성과자로 분류해 ‘면벽 수행’을 시키거나 기존 업무와 무관한 곳으로 전환 배치해 논란이 됐다. 경총 지침은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기업들의 관행을 고착화할 우려가 크다. 공정 인사 지침이 쉬운 해고를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한 셈이다.¹⁰⁾

대통령 박근혜는 2015년 여름부터 ‘노동 개혁 = 일반 해고’의 자유가 우리의 살길이라면서 국회에 민생 경제 파탄의 책임을 떠넘겼다. 선거 때 내세운 경제 민주화와 ‘맞춤형 복지’는 사라진 지 이미 오래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혁에 대해 3대 신문과 3대 방송은 ‘노동 개혁’의 기호로 보도해 나갔다. 두 당사자 가운데 한쪽은 그것을 ‘노동 개혁’이라고 주장했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편파적 보도의 상징적 사례는 KBS 메인뉴스의 “앵커&리포트/막 내린 19대 국회…역대 최악 오명” 보도를 들 수 있다. 앵커 뒤로 ‘식물 국회’라는 큰 자막까지 화면으로 내보내며 국회를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쟁점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4년엔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151일 동안 국회가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식물 국회’라는 말까지 생겨”, “올해 초엔 테러 방지법을 놓고 야당이 192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을 벌이기도”,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쟁점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고, 노동 개혁 법안을 추진해 온 청와대 수석은 눈물”이 이어졌다. ‘쉬운 해고’로 집약되는 노동 개혁법이 폐기된 사실을 다루면서 ‘청와대의 눈물’이라는 ‘기호’로 보도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 5법이 국회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2015년 10월 27일 박 대통령은 국회 시정 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

동계에 전가하기에 앞서 ‘노동 개혁’을 빙자해 지난 3년간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해 왔는지를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제 기준에서 볼 때 해고자 9명 때문에 조합원 수 6만 명의 전국 단위 노조를 법외 노조로 내몰고 노사 자율로 체결된 단체 협약을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정부가 나서서 개정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심지어 헌법과 노동법을 무시하고 행정 지침으로 해고와 임금 결정에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독재 국가 빼고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10)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공정 인사 지침’과 ‘취업 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안내서 또는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라며 ‘지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민에게 구속력 있는 행정 규칙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위는 노동부 2대 지침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법·의료법과 노동 5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촉구했다.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하기 전날, 전경련 산하 대기업들이 미르재단에 기부금 입금을 완료했다. 박 대통령은 2016년 1월1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또다시 쟁점 법안 처리를 주문했다. 노동 법안과 경제활성화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처리를 요구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국민 담화가 있기 전날, 대기업들이 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입금했다.

기실 한국 언론의 자본 편향 보도는 ‘정파성’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심각한 병폐다. 노사 관계 보도에서 노동에 적대적이거나 비우호적 보도의 사례는 많다.¹¹⁾

그럼에도 ‘민주주의의 위기’와 언론 문제를 서술한 언론학자의 논문에서 ‘노동 권리 지수’를 비롯한 ‘노동 문제’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이정훈·이상기, 2016). 실질적 민주주의와 함께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 비평은 ‘민주주의 유지와 성숙’을 새로운 과제로 삼아야 한다.

4. 미디어 비평의 과제

1) 민주주의의 유지와 성숙

지금까지 한국 민주주의가 절차적 차원과 실질적 차원에서 모두 후퇴하기까지 한국 언론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짚어 보았다. 언론학계가 앞서 언급한 두 논문에서 볼 수 있듯이 ‘정파적 틀’로 언론을 나누거나 민주주의의 후퇴와 관련한 언론의 책임을 묻는 데에 소홀했다는 문제의식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노동 개악 보도를 살펴보고, 그 맥락에서 언론학계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기에 어찌면 놓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민주주의 유지와 성숙’을 미디어 비평의 ‘새로운 과제’로 제시했다.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나 미디어 비평의 기준을 ‘민주주의 유지와 성숙’에 뒤야 할 이유는 미국과 유럽의 저널리즘 이론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미국 언론계와 학계는 공

11) 가령, 취업 규칙 임의 변경에 근거한 ‘성과 연봉제’에서도 자본에 편향적인 보도는 이어졌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팀이 분석했듯이 정부와 경영계는 유연한 노동 시장 구축을 위해 성과·직무 중심 임금 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임금 수준 하향 평준화와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해고를 쉽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해가 극심하게 상충하고 있는 문제인 만큼 언론은 ‘나름의 결론’이나 방향을 제시하기 이전에 언론은 최소한 다른 주장을 펼치는 배경과 이유를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는 성과 연봉제와 관련한 보도에서 ‘위기 상황’임에도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만 부각해 보도했다(민주언론시민연합, 2016).

동 연구를 통해 “저널리즘의 목적”을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고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는 데 (free and self-governing)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Kovach & Rosenstiel, 2001, p. 12)이라고 제시했다. 여기서 스스로 다스린다는 의미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보편적 정의인 ‘민중이 지배하는 정부(rule by the people)’ 개념(Held, 1987)과 공장 이어진다. 요컨대 미국에서 저널리즘은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이다. 미국 저널리즘이 제시한 ‘기본 원칙’(Kovach & Rosenstiel, 2001)만 지키더라도 한국 언론의 문제점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하버마스(Habermas, 1962/2001)가 제시한 공론장(public sphere) 개념도 중세 유럽의 신분제적 정치 체제를 허물고 민주주의 사회를 여는 조건이었다. 하버마스에게 언론은 “공론장의 가장 탁월한 제도”다.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은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이론과 이어진다. 숙의 민주주의는 공적인 사안들에 관한 “토론 과정에 시민들의 자유롭고 평등하고 열린 참여를 실현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수준을 진전시키려는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박승관, 2001)다. 쟁점으로 불거지는 공공 의제에 관한 토론 과정에 공중의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를 실현함으로써 높은 품질의 여론을 형성하고, 그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질적으로 더욱 성숙·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박승관은 ‘근대’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회적·정치적 프로그램이 ‘커뮤니케이션’에 기초해 실현되어야 하고 또 실현될 수 있다는 철학적 신념을 모태로 삼아 태동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94쪽).

하지만 한국에서 공론장 형성은 유럽과 다른 길을 걸어왔다. 유럽에서 공론장은 카페와 선술집에서 시작해 문예 공론장을 거쳐 신문을 통해 중세 신분제 체제를 무너뜨림으로써 근대 민주사회를 여는 핵심적인 구실을 했지만, 한국에서 공론장 형성은 갈등의 표출이 자유롭지 못하고 박과 위로부터 제한된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손석춘, 2004).

미국의 저널리즘 이론이나 유럽의 공론장 이론에 근거할 때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가 절차와 실질 모두 후퇴하는 과정에 미디어가 있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의 해법도 찾을 수 있다.

‘민중이 지배하는 정부’를 구현하려면,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고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 역사적이고 구조적으로 제약된 공론장—들머리에 소개한 언론학자들의 시국 선언문 표현을 빌리면 “기울어진 언론 공론장”—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 않도록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비평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유지와 성숙’을 미디어 비평의 확고한 준거로 정립했을 때 구체적 비평의 전략은 무엇일지를 논의할 차례다.

2) 미디어 비평의 전략

(1) 보수·진보 프레임 탈피

저널리즘의 위기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또한 핵심적인 위기를 기사의 위기로 규정한 이재경(2004)은 “세상에 ‘진보적 사실’이 따로 있고 ‘보수적 사실’은 또 별도로 존재한다는 말인가”를 물었다. 이재경의 분석처럼 보수적 사실과 진보적 사실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모두가 공유하는 현실 인식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신문은 어느 정도 편집 경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편부당’을 스스로 강조하는 신문이나 방송을 분석할 때 ‘보수/진보’의 틀로 나누는 것은 옳지도 않고 생산적이지도 않다. 공영 방송을 비평하는 잣대로는 더욱 그렇다.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는 ‘보수 언론’이고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진보 언론’이라고 규정하여 둘 모두를 정파성의 틀로 비판하는 연구나 ‘진영 논리’를 내세워 양비론에 빠지는 논리는 어떤 미디어의 어떤 보도와 논평이 민주주의 후퇴에 책임이 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중요성을 희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보수든 진보든 모두 동의하는 저널리즘 가치인 진실과 공정에 근거해 언론을 평가하고 견인해 나가야 한다. 진실과 공정의 개념에는 ‘민주주의 유지와 성숙’이라는 미디어 비평의 새로운 과제가 담겨 있다. 일찍이 리프만(Lippman, 1954)이 강조했듯이 진실의 기능은 숨어 있는 사실을 규명하는 것, 그 사실들의 연관성을 드러내 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근거해서 행동할 수 있는 현실의 상(a picture of reality)을 보여 주는 것에 있다. 한국 언론은, 이른바 ‘보수’든 ‘진보’든, 얼마나 숨겨진 사실을 드러내고 사실들의 연관성을 짚고 있는지 질문하고 그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사례를 든다면, 아직 실체가 온전히 드러나지 못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나, ‘일반 해고’ 정책의 강행과 대통령의 재벌들 독대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보도와 논평은 한국 언론이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성숙시켜 갈 때 풀어야 할 과제들이다. 그 과제에 어느 언론이 얼마나 더 충실한지가 언론의 품격이나 ‘품질’을 비평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저널리즘의 또 다른 핵심 가치인 공정은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어야 하고 사회적 약자 대변을 미덕으로 한다(손석춘, 2006). ‘보수적 언론 단체’로 꼽히는 관훈클럽조차 <한국 언론의 좌표: 한국 언론 2000년 위원회 보고서>에서 “한국 언론은 중산층을 주된 소비자로 상정하고 있는 한편, 언론인 자신들도 중산층에 편입되어 있어 주로 중산층의 의견을 대변하고 그들의 이익을 옹호”한다면서 “그 결과 자연스럽게 소수 계층의 의견과 이익은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다고 비판했다(관훈클럽, 2000, 185쪽).

보수·진보의 틀 탈피가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로의 환원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기

존의 민주 대 반민주 구도 담론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한정되어 노동 있는 민주주의나 실질적 민주주의를 아우르지 못한 논의였다. 언론의 정파주의를 비판하면서 정파 자신이 정파 논리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보수/진보의 틀이나 진영 논리를 벗어나야 한다.¹²⁾

(2) 노사 관계 비평 확대

실질적 민주주의나 '노동 없는 민주주의'는 보수나 진보의 이념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성숙의 문제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국력과 위상을 드러내는 자랑스러운 이미지로 선전되고, 그와 정반대로 노동은 그들의 "발목을 잡는 하찮은 무리"나 어둠의 무리처럼 인지되는 현실에서 민주주의가 내용을 갖고 성숙하기는 어렵다(최장집, 2006).

민주주의와 노동의 상관성은 지구촌 곳곳에서 민주주의 위기가 자본주의 체제의 신자유주의적 정치, 시장 급진주의의 경쟁 지향성, 사회적 양극화와 같은 정치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쟁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덕목으로 삼는 신자유주의로 인해 경쟁에서 이긴 승자는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롭게 되고, 사회적 몰락을 위협받는 계층은 자신보다 더 하위 계층(underclass)을 배제함으로써 위안을 찾는다. 하버마스가 말한 민주주의의 '보편주의적 핵심 세력'이 해체되면, 노동자 권리를 위한 역사적 투쟁의 최종적 결과로서 등장한 민주주의의 기반은 침식당할 수밖에 없다(임운택, 2015).

여기서 자본주의가 단 하나의 모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자본주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 VOC) 이론은 2001년 소스키스(D. Soskice)가 '자유시장경제'(LME)와 '조정시장경제'(CME)를 비교한 연구를 발표한 뒤 여러 나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Hall & Soskice, 2001).

12) 한국 언론의 진영 논리를 비판하며 실상은 자신이야말로 특정 진영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언론학자의 사례는 한구섭을 들 수 있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인 한구섭은 '편향'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회과학자로서의 시각에서 보면, 이념의 양극화에서 기생할 수밖에 없는 언론의 생태계에 원인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언론사 간 이념적 양극화가 극심하다"라며 "이 같은 극단적인 이념적 갈등 때문에 보수·진보 언론이 건 건설적인 비판마저 수용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한국 언론의 진영 논리를 종종 거론해 온 그는 "한국에서는 KBS의 사례에서 보듯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언론사 내에서 상대 진영 사람들을 다 몰아내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언론 관련 시민 단체도 마찬가지"라며 "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몰리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기자들이 본인의 중요한 실생활과 직결되는 커리어, 생존과 직결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언론 환경이라면 절대 성공하는 대통령은 나올 수 없다"라고 밝혔다(미디어스, 2014). 박근혜 정부 1년을 평가하는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으로 이 논리에 따르면 박근혜도 '언론' 때문에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자본주의 또는 시장경제 체제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단일화하고 있다는 논리가 한국의 학계와 언론계에선 지배적이지만, 미국식 자유 시장 경제와 유럽식 조정 시장 경제의 차이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하다. 따라서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을 유일한 선진 경제체제로 - 의식했던 안 했든 - 전제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옳다(손석춘, 2014).

미국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연구하면서 한국 사회의 공론장은 물론, 대학의 학문적 공론장마저 '티나(TINA: There Is No Alternative)식 사고'가 지배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적 노사 관계가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다. 따라서 어느 언론이 신자유주의적 체제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전제하고 있는지, 어느 언론이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에 다양한 체제가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수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가고 있는지, 어느 언론이 실질적 민주주의를 '노동 있는 민주주의'로 인식하고 보도와 논평을 해 가고 있는지 면밀하게 짚어 가야 한다.

한국의 노사 관계는 공론장 못지않게 기울어져 있다. 한국 언론은 노사 관계를 의제로 설정해 오는 데에 대단히 인색했고, 설령 보도와 논평을 하더라도 대부분 '자본 편향'이었다. 비정규직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노동 시간이 가장 긴 자본주의 체제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에 유의한다면, 노사 관계와 관련한 보도와 논평은 지금과는 견줄 수 없을 만큼 풍부해질 수 있다. 3대 신문과 3대 방송의 노사 관계 보도에서 나타나는 '자본 편향'도 미디어 비평의 주요 영역이 된다.

(3) 주권자의 역량 강화

앞서 미국 언론계와 학계는 공동 연구를 통해 "저널리즘의 목적"을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고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Kovach & Rosenstiel, 2001, p. 12)이라고 언급했다.

언론의 궁극적인 주권자는 독자와 시청자, 곧 민중이다. 헬드(Held, 1987)의 정의처럼 민주주의가 '민중에 의한 통치'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중의 역량 강화(empowerment)다. 이정훈과 이상기(2016, 14~15쪽)는 민주주의에 '식견 있는 시민(informed citizen)'의 존재가 필수적인데, 그러려면 언론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어야 한다면서 셔드슨(Schudson)과 맥네어(McNair)의 연구를 들었다. 셔드슨(2008: 정훈·이상기, 2016 재인용)은 건전한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서는 정보 제공(information), 탐사(investigation), 분석(analysis), 사회적 공감(social empathy), 공적 토론(public forum), 동원(mobilization)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언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맥네어(2010: 정훈·이상기, 2016 재인용)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수행해야 할 기능으로 정보 제공(inform), 교육(educate), 발표의 장

(platform), 공표(publicity), 옹호(advocacy)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언론이 서드스과 맥네어가 제시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미디어 비평을 통한, 수용자인 민중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시민운동, 여성 해방 운동과 함께 등장한 '임파워먼트'는 “개인이 자신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강점과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에 대해 새로운 태도를 가지며, 삶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개발하여 내적인 힘과 행동력을 키우는 과정”이다(한국심리학회, 2014).

현대 사회의 구성원들은 미디어가 포화 상태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와 인식이 중요하다(Masterman, 1980). 더구나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아 비판적인 정보 수용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정보 격차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미디어와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에 대해 비판적 안목을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갖춘 시민(empowered citizen)을 길러 내야 한다(Buckingham, 2000). 디지털 미디어 전반에 걸쳐 민주주의 유지와 성숙을 저해하는 ‘언론 행위’들에 대해 미디어 비평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할 이유도 여기 있다. 이는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고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저널리즘의 목적과 이어진다. 따라서 미디어가 저널리즘의 목적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짚어 가는 소극적 비평과 함께 민주주의의 이상인 자기 통치를 위해 민중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시하는 적극적인 비평을 실행해 가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체제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전제하는 언론을 비판하며 자본주의에도 다양한 정치 경제 체제가 존재한다는 사실, 보편적 복지 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선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의제 설정을 촉구하는 비평들이 그것이다(손석춘, 2015). 이를 위해 언론학계가 지역별·부문별 사회 운동 단체들과 더 유기적으로 결합해 나갈 필요가 있다.

5. 결론

민주주의의 유지와 성숙은 오래된 언론의 과제다. 이 논문은 언론이 그 ‘오래된 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느냐를 미디어 비평의 ‘새로운 과제’로 제시했다. 민주주의 후퇴에 언론의 책임이 크에도 언론 현장에선 미디어 비평이 오히려 축소되거나 사라져 왔기에 ‘새로운’에 담긴 의미는 더 크다.

신문의 미디어 비평은 명맥만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 봄에 KBS가 13년 동안 방송해 온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폐지함으로써 방송에선 더는 미디어 비평을 찾아

볼 수 없다. KBS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은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사장들이 끊임없이 폐지하려다가 내부 저항으로 그나마 2016년 4월까지 유지되어 왔다. 방송사 안팎의 ‘압력’을 이겨내며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만들어 온 점은 평가받아야 옳지만 내용을 짚어 보면 한계도 보인다. 2003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10년간 방송한 내용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정치 영역에서 ‘피상적, 받아쓰기 보도’를 근거로 제시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 이 ‘편파, 불공정 보도’였다. 사회 문화 영역에선 ‘과장, 선정 보도’의 비율이 29.4%으로 가장 높았다.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 선정적인 장면을 강조하는 행태를 비평했다(홍원식·김은정, 2013). 언젠가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다시 선보일 때는 ‘민주주의의 유지와 성숙’을 목적으로 내걸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실질적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후퇴할 때, 언론과 언론학은 무엇을 했는지를 짚어보았다. 물론, 모든 언론학계가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현실에 학문적으로 침묵하거나 잘못 분석했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과도 맞지 않고 그럴 의도도 없다. 다만 민주주의 위기가 극한에 이르던 2016년 상반기에 발표된 두 논문이 연구자가 10년 전에 비판한 ‘정파성 프레임의 문제점’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민주주의의 유지와 성숙’을 미디어 비평의 과제로 제시했다. 그 과제를 구현할 전략으로 보수·진보 프레임 탈피, 노사 관계 비평 확대, 주권자의 역량 강화를 제안했다.

2016년 10월 말부터 타오른 촛불은 박근혜의 파면을 불러왔고 여론 지형을 크게 바꿨다. 한국은 절차적 민주주의 회복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뤄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촛불을 밝힌 주권자들이 그 과제를 풀어 가는 길에 미디어 비평은 ‘진영 논리’를 벗어나 노사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고 주권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언론학계가 학술지에 ‘미디어 비평’이나 ‘저널리즘 분석’ 고정란을 만들고 적어도 한 편씩은 논문을 게재해 가길 제안한다.¹³⁾ 이 논문에서 인용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을 비롯해 여러 언론 관련 단체에서 중책을 맡아 활동해 온 언론학자들도 적지 않다. 그 열정과 활동이 학회와 학술지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언론 현실을 주제로 한 언론학자들 사이에 실명 비판과 반비판¹⁴⁾을 통해 학문적으로 더 의미 있고 보편적인 비평의 틀을 만들

13) 물론, 논문의 들머리에서 밝혔듯이 미디어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들도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옳다. 어쩌면 그것이 더 근본적인 과제일 수 있겠지만, 이 논문에선 ‘각주 3)’에서 밝혔듯이 좁은 의미의 미디어 비평에 한정했다.

14) 이 논문을 학회에서 발표한 이후 보수·진보 진영 논리에 함몰된 언론학자들에 대해 현장 언론인이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국방송학회가 2017년 2월14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최승호 MBC 해직 PD(뉴스타파 앵커)는 “여러 학회에서 공영 방송 문제에 성명을 내주셨지만 여전히 학계에서 MBC 문제를 진영 논리로 바라보는 것 같다”

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한국연구재단의 '정형화된 글쓰기'¹⁵⁾를 벗어나는 학술 운동일 수도 있다. 이 논문이 지닌 시론적, 또는 원론적 한계도 그때 극복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라며 “기자들은 진보 편에서, 경영진은 보수 편에서 진영 싸움을 하고 있다고, 그 정도로 치부하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최 PD의 발언은 한국방송학회 회장 출신인 유의선 방문진 이사를 두고 한 말이다. 최 PD는 언론학계 내부에서 토론과 견제, 상호 비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5) 경향신문이 ‘지식인의 죽음’을 내걸고 장기간에 걸쳐 연재한 기획기사에서 “등재지에 딱딱하고 재미없는, 심지어 같은 전공자들도 안 읽을 글”들만 양산한다는 지적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학자들의 인터뷰에 근거를 둔 것이다. 정형화된 방식으로 “틀에 박힌 지식을 생산”해 “답론 논쟁을 주도”하지 못한다는 비판(경향신문특별취재팀, 2008)이 나온 지도 어느새 10년이 지났다.

참고 문헌

- 경향신문 (2016, 6, 13). 3년 연속 최저등급 기록한 한국 노동자권리의 현실. A31면.
- 경향신문특별취재팀 (2008). <민주화 20년 지식인의 죽음>. 후마니타스.
- 박병찬 (2015, 4, 1). 당신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한겨레>. URL: <http://2012.hani.co.kr/arti/opinion/column/684975.html>
- 관훈클럽 (2000). <한국언론의 좌표: 한국언론 2000년위원회 보고서>. 관훈클럽.
- 매일노동뉴스 (2016, 6, 13). 한국, 3년 연속 노동권 최하위 국가 불명예.
URL: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536>
- 미디어스 (2014, 2, 24). 박근혜 1년: 정부, 언론의 이념적 극단성 조장한다. URL: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44>
- 민주언론시민연합 (2013).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에 대한 신문·방송 보도. URL: <http://www.ccdm.or.kr/xe/watch/12907>.
- 민주언론시민연합 (2016).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중동 보도. URL: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cdm1219&logNo=220706093568>
- 박승관 (2000). 속의 민주주의와 시민성의 의미. <한국언론학보>, 45권 1호, 162-194.
- 박영흠·김균 (2016). 의례로서의 저널리즘: 한국 저널리즘의 정파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한국언론학보>, 60권 1호, 202-228.
- 선정민 (2013, 6, 29). 시국선언 이어 촛불...국정원 사건 시위, 광우병 때와 닮은꼴. <조선일보>, 8면.
- 손석춘 (2006). 저널리즘 위기의 실체와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36호, 42-77.
- 손석춘 (2006, 6, 10). 활짝 핀 '악마의 꽃'. <한겨레>, URL: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130909.html>
- 손석춘 (2014). 도구적 지식과 지식인의 도구화: 대학·자본·권력의 삼각동맹론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이론>, 10권1호, 25-58.
- 손석춘 (2015). <민중언론학의 논리> 서울: 철수와영희.
- 이민웅 (2003). <저널리즘: 위기·변화 지속>. 서울: 나남.
- 이재경 (2004). <저널리즘의 위기와 언론의 미래>. 신문과 방송 40주년 세미나 발표문. 서울: 프레스센터.
- 이정훈·이상기 (2016). 민주주의의 위기와 언론의 선정적 정파성의 관계에 대한 시론. <한국언론정보학보>, 77호, 9-35.
- 임운택 (2015). 권위적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와사회>, 106호, 325-359.
- 정미정 (2009). 우리 언론은 '노무현'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한국언론정보학회 토론회 '검찰수사와 언론보도, 무엇이 문제였나?'> (3-21쪽).
- 정상근 (2013, 10, 28). "경찰 제대로 수사발표했으면 문제인이 당선됐을 것". <미디어오늘>. UR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763>

- 정우상 (2013, 6, 24).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에 등장한 '박근혜 OUT'. <조선일보>, 4면.
- 최장집 (2006). <민주주의의 민주화>. 서울: 후마니타스.
- 최장집 (편) (2005). <위기의 노동: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서울: 후마니타스.
- 한국심리학회 (2014). <심리학용어사전>. URL: <http://www.koreanpsychology.or.kr>
- 홍원식·김은정 (2013). TV 미디어 비평의 어제와 오늘: 미디어비평(KBS) 10년, 내용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64호, 59-84.

- Buckingham, D. (2000). *The making of citizens: Young people, news and politic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Habermas, J. (1962).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Untersuchungen zu einer Kategorie*. 한승완 (역) (2001).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서울: 나남.
- Hall, P., & Soskice, D. (2001). *Varieties of capitalism*. Oxford, UK: Oxford Univ Press.
- Held, D. (1987). *Models of Democracy*. 이정식 (역) (1993). <민주주의의 모델>. 고양: 인간사랑.
- Kovach, B., & Rosenstiel, T. (2001). *The elements of journalism*. New York, NY: Crown Publishers.
- Lippman, W. (1954). *Public opinion*, New York, NY: McMillan Company.
- Masterman, L. (1980). *Teaching about television*. London & Basingstock: Macmillan Press.
- McNair, B. (2011). *An introduction to political communication* (5th ed.). New York, NY: Routledge.
- Schudson, M. (2008). *Why democracies need an unlovable press*. Malden, MA: Polity

투고일자: 2016. 11. 30. 게재확정일자: 2017. 3. 24. 최종수정일자: 2017. 3. 26.

The Limit of Conservative-Progressive Frame and Strategy of Media Criticism

Seok Choon Shon

Professor, Department of Media and Communication, Konkuk University

This paper argues that media criticism should be reestablished as an academic movement leading to the maintenance and maturity of democracy.

Korean democracy has been withdrawn both procedurally and practically. However, the Korean media do not properly monitor democratic retreat. The purpose of journalism is to provide people with the information they need to be free and self-governed, and the public sphere is a condit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This paper proposed three practical strategies for media criticism. First, it is the overcoming of the conservative-progressive frame. It is important to look at what kind of media is responsible for democratic retreat. Second, media criticism should be expanded on workers and capitalists. Korea's labor relations are as distorted as the public sphere. Korean journalism did not set agenda for labor relations. Most reports were 'capitalist bias'. Finally, Media criticism should be the empowerment of the people who are the sovereigns of the media.

KEYWORDS Media Criticism, Journalism, Empowerment, Democracy